

新국제경제질서와 韓國 경제의 진로

이 논문은 지난 10월 30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자료를 옮긴 것이다(편집자註)

具本湖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 머리말

지금 우리경제는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환경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分岐點에 처해있다 하겠다.

앞으로 대외적으로 이데올로기시대의 종언, 세계경제의 불력화, 상호주의적 압력의 팽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향방 등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대내적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 각계층의 가치관변화와 민주화진전으로 인한 형평욕구 및 집단이기주의 증가 등은 우리경제의 선진국 달성여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변수일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진로와 대응방향에 대한 고찰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 신국제경제질서의 전개

東歐圈의 자유화에 이어 소련에서의 급격한 변혁의 바람은 동서간의 이데올로기대결의 시대가 종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물론 많은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앞으로 국제관계는 점차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가게 될 것이다.

첫째는 과거 냉전체제하의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 으로부터 경제력에 바탕을 둔 이해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으로, 정치적 양극체제로부터 각국이 경제적 이해를 중시하는 경제적 다극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먼저 美國과의 관계에서 보면 韓國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우방관계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점차 韓國에 대해 동등한 자격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level playing field) 경쟁하는 경제적 경쟁자의 시각에서 보려 할 것이다. 또 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美·蘇의 양극체제에서 앞으로 경제적으로는 다극체제 특히 日本과 EC의 역할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EC가 '92년 이후 역내시장 단일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 제고, 국제자본의 유입 및 투자확대를 기함으로써 EC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날 전망이다. 日本의 경우에는 세계최첨단의 수준에 있는 핵심산업기술과 내수확대로 건설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3,500億달러에 달하는 대외순자산상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속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다.

상대적으로 美國은 경제적 비중이 그동안 감소되

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中東 및 소련사태 등을 통해 강화된 정치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기간 세계최대 단일시장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汎世界主義(Globalism)의 진전

장기적으로는 통신·교통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범세계적 경제교류가 증대됨으로써 세계경제가 하나의 지구촌경제(Global Economy)로 변모해 가게 될 것이다. 정보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됨에 따라 특정국가나 지역에 의한 정보와 자본의 독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진국·개도국간의 경쟁 및 보완관계가 증대됨에 따라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수평적 분업체제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을 기축으로 하여 세계지향적 거대기업이 등장하고 국제적으로 자본시장이 통합되어 국제간자본이동 속도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간 경쟁의 심화는 물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간 경쟁도 치열하게 될 것이다. 국내경제정책수립시에도 외국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여야 하는 제약이 받게 되는 등 경제정책의 국가간 협력 및 조화도 진전될 것이다.

2. 지역주의의 대두와 지역경제통합

EC 1992로 대표되는 유럽의 경제통합은 지역주의경향의 대표적事例라 할 수 있다. EC는 종래의 상품과 노동,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경제규제 및 통화단일화를 통해 시장단일화를 진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결속강화는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6개국에도 확산되어 '93년 1월에는 EC를 통합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이 창설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통합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EEA에 동구국가까지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汎유럽주의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역외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보호무역주의경향이 강화되어 차별적인 무역과피 내지 무역

전환이 예상된다.

지역주의경향의 또하나의 사례는 北美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인 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89년부터 관세와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내용으로 한 FTA가 발효하고 미국과 멕시코간에도 FTA결속을 위한 협상을 개시, 금년말에는 이의 체결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같은 低賃金國의 상품유입으로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저가상품수입의 감소 등 국제분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유럽 및 北美의 지역주의강화경향에 비하면 亞·태지역에서의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은 아직 비공식적이고 비제도화된 상황이라 하겠다.

민간차원의 PECC활동에 이어 정부각료협력기구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1990년에 발족되어 지역내경제협력 움직임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東아시아지역은 역내 및 역외무역이 가장 활발하였다. 또 이러한 빠른 무역증가에 힘입어 東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도 이룩하였다. <表2 참조>

<表-1> 역내 및 역외교역의 증가율(1980-89)

(단위: %)

| | EC | 北美 | 東南亞 |
|-------|------|------|------|
| E C | 5.2 | - | - |
| 北 美 | 8.2 | 9.7 | - |
| 東南亞1) | 12.4 | 12.8 | 12.9 |

註: 1) 일본,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ASEAN국가

<資料>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1991.

이러한 추세는 외부여건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계속 활발한 상호작용과 생산·무역관계의 확산을 통해 지속됨으로써 태평양경제권의 Dynamism을 유지시키고 역내국가들의 활발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亞/태지역내에서는 무역구조상 FTA와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소비재중심의 제조업체품수출이

늘어나고,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산업화과정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의 수출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 개도국과 선진국사이에 경쟁 및 보완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즉 亞/太지역국가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산업화과정에 있으므로, 경쟁력차이에 따른 국제분업을 통해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다 (50年代 日本이, 60年代에 韓國, 臺灣, 홍콩이, 70년대엔 ASEAN 제국이 산업화과정을 시작하여 각기

다른 발전과정에 있음). 이에 따라 경쟁력 상실 산업의 해외이전 및 직접투자, 기술이전을 통해 亞·太지역내의 보완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또한 80년대 중반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내 분업체계의 재편성과 상호교역증가는 역내국가간 투자기술이전, 금융 및 자본거래, 기타 생산요소의 이동, 공동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교류형태를 띤 복합적 상호의존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表-2〉 GDP 및 교역증가율

(단위 : %)

| | G D P | | 교역 | | | |
|------|---------|---------|---------|---------|---------|---------|
| | | | 수출 | | 수입 | |
| | 1965~80 | 1980~89 | 1965~80 | 1980~89 | 1965~80 | 1980~89 |
| 世界 | 4.1 | 3.1 | 6.7 | 4.1 | 4.7 | 4.3 |
| 東아시아 | 7.3 | 7.9 | 10.0 | 10.0 | 7.2 | 7.6 |
| (韓國) | (9.9) | (9.7) | (27.2) | (13.8) | (15.2) | (10.4) |
| 아프리카 | 4.2 | 2.1 | 6.1 | -0.6 | 5.7 | -5.9 |
| 中南美 | 6.1 | 1.6 | -1.0 | 3.6 | 4.1 | -3.7 |
| OECD | 3.8 | 3.0 | 7.3 | 4.1 | 4.2 | 5.1 |

〈資料〉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3. 우루과이라운드와 다자간무역협상

우루과이라운드는 한편으로는 지구촌경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유무역질서의 확대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점증하고 있는 지역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의 보호무역경향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

작년 12월의 브뤼셀회담에서 당초 계획대로 타결짓지는 못했지만 국제무역질서의 재정립의 필요성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지어질 것으로 다자간 무역질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시도와 더불어 교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무역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GATT체제에서 예외로 취급되어 온 농산물교역에 대해서도 교역자유화의 폭이 확대될 것이며, 서비스協定(GATS)에 따라 서비스교역도 단계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져 서비스분야에서도 세계적 분업형태로 발전함으로써 국제화의 심화가 예상된다.

GATT의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등을 통해 산업·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정부보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가 예상되며 92년

6월중 GATT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첫번째 TPRM을 실시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산업육성제도와 행정규제를 국제규범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증대될 것이다.

만일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하게 되더라도 개별적인 다자간 및 쌍무적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통상협상은 상당부분 당사자간의 역학관계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포괄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우리에게서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소련 및 동구권의 자유화

동구제국, 소련 등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개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앞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中東지역의 자금수요와 맞물려 국제금융시장에 자금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동구권의 경제재건을 위한 총수요의 증가가 수입수요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韓國경제에 대해 수출신장,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등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들 국가와의 경쟁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나 중급품상품이 특히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음에 우리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韓國경제의 진로

1. 국내여건의 변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이 형성될 국제경제질서는 우리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가속화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국내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산업조정압력이 심화되고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급속히 제고될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식구조의 변화로 생활양식과 소비구조가 다양화되는 한편 사회형평,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정치민주화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국민의 정책결정참여욕구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주요 구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방과 북한내부 경제의 어려움으로 북한경제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며 지난 9월 남북한 UN동시가입은 평화공존의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징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대응의 기본전략

'90년대 우리경제사회의 발전목표는 국제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민족통일을 촉진하고 대비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배양과 삶의 질과 환경의 개선을 통한 복지사회의 기반확립을 양대과제로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배양과 복지사회의 기반확립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내외여건에 부응하여 정부와 민간 각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은 스스로의 책임아래 성장해 나가기 위한 경영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주요기업의 경영목표는 고기술분야에서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술집약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 對外的으로는 기업전부문에 걸

친 국제화와 국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내적으로는 혁신지향적 기업문화를 배양하여야 할 것이며 혁신지향적 기업문화를 위해서는 종업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체제를 개발해 나가고 경영성과를 공정히 배분함으로써 종업원의 귀속의식을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기구의 실패를 수정하고 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며 아울러 민가부문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革新을 조장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지식·기술집약화를 위한 산업하부구조를 확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정부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지양하고 동시에 금융·조세·토지부문의 제도개혁을 이루고, 공정경쟁과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정부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체제, 교육훈련제도 및 사회간접자본 등 산업하부구조의 선진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회각계각층을 형성하는 시민들의 민주시민의식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사회단체를 통한 집단이기주의의 추구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3. 韓國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 1) 경제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혁과 산업하부구조의 확충
 - 경쟁창달을 위한 제도개혁
 - 금융의 자율화
 - 기술개발체제와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개방화에 부응한 산업구조 합리화
- 2)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사회형평의 증진
 - 생활환경의 개선
 - 전인교육을 통한 인간개발
 - 사회복지의 확충
 - 재정기능의 제고
- 3) 국제협력 및 南北韓 경제협력의 증진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형성에의 능동적 참여
 - 평화통일의 기반구조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